

상반기 산재 사망 사고 10% ↓ ...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업은 ↑

고용부, '2023년 6월 말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산재 사망 289명, 9.1% 감소... "위험성 평가 영향"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은 증가... 추락·깔림 등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업은 오히려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89명(사고 건수는 2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8명)보다 9.1%(29명) 줄어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명 감소했다. 제조업(81명)과 기타 업종(61명)도 각각 19명, 5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179명으로 18명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110명으로 11명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추락(111명), 끼임(35명), 부딪힘(33명) 사고가 각각 21명, 1명, 9명 감소했다. 반면 깔림과 뒤집힘(26명), 물체에 맞음(39명)은 8명, 7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가 다소 줄어든 데 대해 2명 이상 사망 등 대형사고

사망자(10명)가 전년(17명)에 비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확산도 사망사고 감소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고용부는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27일 노동자 사망 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을 시행했으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노사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예방 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50인 이상 제조업(29명)으로 전년(52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고정된 기계 설비와 정형화된 공정으로 위험성 평가 도입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 점검이나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과거 보다는 위험성 평가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많이 실시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험성 평가의 현장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57명)는 전년보다 7명 늘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주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깔리고 자재에 맞는 사고가 많았다. 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중에서도 800억 이상은 줄어든 반면 120~800억은 늘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부족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보다 대형 로펌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있어 사고

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대 건설사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검찰에 기소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올해 1월 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처벌대상 및 수준 등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최 정책관은 "당초 지난 6월 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워낙 관심이 많고 중대한 사안이라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TF에서는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한 대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유나기자



'정율성 공원 철거하라' 3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대 의견을 내세운 보훈단체 회원들이 청사에 들어가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업중단' 모두 상승

교육부·KEDI,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를 그만둔 학생의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교육대학(교대)은 통계 작성 이래 첫 3%를 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2만2843개교의 기본사항을 조사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30일 이같이 발표했다. 전체 학생 수에 견줘 학업 중단자 수의 비율을 뜻하는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조사 대상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초등학교는 0.7%로 0.1%포인트(p), 중학교는 0.7%로 0.2%p, 고등학교는 1.9%로 0.4%p 각각 높아졌다. 일반대와 전문대, 교대 등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업 중단율은 7.2%로 0.2%p 상승했다. 학업 중단자 수는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1만9415명, 중학교 9585명, 고등학교 2만3981명, 대학은 20만118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은 268명 줄었지만, 초등학교(4026명), 중학교(2350명), 고등학교(3850명) 등 다른 학교급은 전년 대비 모두 규모가 늘어났다. 특히 교대의 학업중단율은 3.2%를 기록해 2021학년도 2.4%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3%를 넘었다. 학업중단자 수는 478명으로 108명 증가했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와 정부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 축소 기조 등이 맞물려 학생들의 교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4월 기준 초·중·고 교원 수는 44만 497명으로 지난해(44만1796명) 대비 1299명(0.3%) 감소했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78만3612명으로 지난해(587만9768명)와 비교해 9만6156명(1.6%) 줄었다. 유치원생이 지난해와 견줘 3만1018명(5.6%) 감소해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초등학생 6만349명(2.3%), 중학생 2만1597명(1.6%) 순이었다. 고교생은 지난해보다 1만5921명(1.3%) 늘어났다. 유치원(8441개원)은 지난해보다 121개원 줄었다. 원아 급감으로 인한 폐원 문제가 심화된 것이다. 반면 초등학교(6175개교)는 12개교, 중학교(3265개교)는 7개교, 고등학교(2379개교)는 6개교씩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증가했다. 폐교 학교도 발생하고 있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설 학교도 늘고 있다. 뉴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